

## 종합·해설

“애들아 우리가 올라가마”

짧은 추석 연휴…逆귀성 늘어



추석 귀성행렬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흑산도에 사는 노부부가 광주에 있는 아들집을 찾기 위해 목포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수레에 선물을 기득하고 비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정겹다.

/목포=워치링기자 jwvi@kwangju.co.kr

지자체 자율통합 건의서 마감…통합 일정과 전망

## 전남 2곳…내달 여론조사후 주민투표

여수·목포권·전주 등 전국서 18곳 제출

상당수 지자체 반대…실제 통합 미지수

행정구역을 자율적으로 통합하겠다며 건의서를 낸 지역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은 호남 3곳, 수도권 7곳, 충청 5곳, 영남 3곳 등 총 18곳으로 통합 대상 지자체는 46개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통합 지역(10곳, 25개 지자체)보다 배가량 많은 것이다. 하지만, 신청 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데다 다음달부터 통합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통합 전망=호남권은 여수·순천·광양·구례, 목포·무안·신안, 전주·완주로,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충청권은 충북의 청주·청원, 괴산·증평, 충남의 척안·아산, 홍성·예산, 부여·공주가 포함됐으며, 이를 지역도 청주, 괴산, 척안, 홍성, 부여 등 통합의 한쪽 당사자만 적극적이다.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군위, 경남의 마산·창원·진해·함안, 진주·산청이 통합대상에 올랐으며 군위와 산청이 적극적인 편이다. 마·창·진·함 지역은 창원·마산은 창원·마산·진해의 조합을 원하고 있으나 진해는 창원·진해, 함안은 창원·마산·진해·함안의 통합을 원해 대상이 엇갈린다.

◇통합구역과 지원내용=행안부는 내달 통합신청 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모두 50% 이상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면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두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서 내년 7월 통합 자체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자체단체에는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체 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 주자 지원한다. 통합 직전에는 시·군·구별로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선거-행정구역 개편 빠른 시간내에 해야”

李대통령 G20 유치 보고 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G20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라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면 정부가 내놓겠지만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지역 위해 일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고 반문하고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 따라 하게 됐는데 지역을 만들어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아직도 겨울”이라며 “며칠 후면 추석인데 일자리가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액신용대출 정책, 휴대전화 요금을 비롯한 통신비 경감 대책, 서민용 아파트 공급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학자금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친서민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대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풍년이라는데 농민의 수심은 더 깊어진다”면서 쌀 정부수매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제5차 G20 정상회의 국내 유치와 관련, “(유치 확정 순간)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게 되었구나,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수원후보 당선 시키겠다”

손학규 前대표 재보선 지원 정치활동 재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1년여의 ‘집거’를 끝내고 사설상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 지원을 계기로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것. 지난 4월 재보선에서도 선거지원을 했지만 아무런 직임이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보다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선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손 전 대표가 수원 장안에 공천된 이찬열 지역위원장의 선대

위원장은 맡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10월 재보선 전체 선거의 선대위원장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위원장의 공천 확정에 따라 상경,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수원에서 이 위원장을 당선시킨 뒤 돌아오겠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수원으로 직행, 곧바로 지원사격에 돌입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故 김대중 前 대통령 묘비·추모비 제막식

지난 8월 18일 서거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묘비와 추모비 제막식이 오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 고인의 묘역에서 열린다.

묘비(가로 1.48m, 세로 3.46m)에는 전면과 측·뒷면에 각각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묘’란 문구와 고인의 주요 공적, 경력, 가족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또 추모비(가로 2.6m, 세로

1.8m)의 전면에는 성경 구절과 고은 시인의 추모시 ‘당신이 우리입니다’가, 뒷면에는 고인의 일기와 저서 ‘행동하는 암심으로’에서 발췌한 문구가 각각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과 동교동계 측근, 민주당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